

尹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4박6일 순방길

북·러 군사협력 경고 등 기조연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면담
30여개국과 양자회담 등 일정소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한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9시경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공군 15비행단장 등의 배웅을 받고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늦은 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해 양자 회담 등 현지 일정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4박 6일간의 미국 순방을 통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롯해 유엔 사무총장 면담 및 30여국 이상과 양자회담 등 여러 일정을 소화한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 등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기여, 기후대응,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제정의 필요성 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도시가 결정되는 오는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앞두고, 30여국 이상과 양자회담을 통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등 총력전에 나선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4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2일 뉴욕을 출발해 23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韓 기업, 인니 디지털·그린 전환 돕는다

무협, 한-인니 미래산업 협력 포럼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교역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의 디지털·그린 전환 정책에 힘입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투자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기업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한-인니 미래 산업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의 스타트업, 핵심광물, e모빌리티 및 2차전지, 스마트시티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부회장은 이날 포럼 개최사를 통해 "인니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신선 농산물 저장 및 유통 현대화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일손이 부족한 산업에 젊고 풍부한 인니의 인적 자원이 필요할 수 있어 인적 교류 확대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핵심광물 등 협력 논의
“인적자원 필요… 교류확대 제안
전년비 교역 33%, 투자 16% 상승”

인니 장관 “니켈 매장량 세계 1위
음극재 등 한국과 투자·협업 기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통시장과 제조업 금융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며, 이차전지, 전기차, 수소 산업 등 그린 전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제리 삼부아가 차관은 “작년 한-인니 교역은 전년 대비 33.1%, 투자는 15.7% 증가해 경제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인니 저개발 지역의 농부들을 위한 창고 영수 시스템,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한국 기업의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과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간 협력과 인도네시아 핵심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한 교류도 기대되는 분야다.

무협 진지민 해외마케팅실장은 “협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물리아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미래산업 협력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신 성장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한 2가지 중요한 생태계 요건인 시장 확보와 자금 조달 측면에서 양국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IPS)의 공동운을 통한 자본 지원 ▲대기업과 공공분야 오픈이노베이션 교류 ▲한국 ICT 기업의 인니 스타트업 디지털인프라 고도화 지원 등 성장단계별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이르완다 아리프 장관 특별보조관은 “인니는 전 세계 니켈 매장량 1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활용해 전기차 생태계 전반의 밸류 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음극재, 분리막 등 전기차 배터리 부품 관련 분야는 물론이고 니켈, 보크사이트, 주석 제련 고급 공정과 광업 부문까지 한국 기업의 투자와 협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의 4배 규모 면적으로 추진 중인 신수도 누산타라 개발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참여도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모하메드 알리 브라위 차관보는 “인니 정부는 앞으로 누산타라를 2045년까지 인니를 대표하는 스마트, 그린, 지속가능의 탄소중립 도시로 완공할 계획”이라며 “이미 스마트하나 UAM교통체계 구축 등과 관련해 LG, 현대 등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나, 그린전환, 디지털전환, 선진교통체계 구축 등 더 많은 분야에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유가 등 불확실성 지속… 물가안정 역점”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대내·외 리스크 철저히 관리 할 것”
첨단산업 클러스터 후속조치 마련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8일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에 대해 언급하고 물가안정에 정책적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5년간 2조2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동향을 이 같이 진단하고 대내외적 위험요인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반도체 등 수출부진 완화와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중국인관광객 증가 기대감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요국의 통화긴축 지속 등에 따른 세계 경기둔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 등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대응책으로, “주석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7월 초 배럴당 70달러 선에 머물던 서부텍사스산중질(WTI) 등의 국제유가 선물은 이날 오후 기준 90달러를 넘겨 거래되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과 중소기업·교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월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의 후속조

치를 마련 중이다. 추 부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인프라 조성 등 클러스터(산업집적지) 내 창업·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내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는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벤처캐피탈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신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외부출자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해외투자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중소형 제조업체들의 디지털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중소기업 1100개사 등 2027년까지 5000개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조공정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자율형 공장’을 비롯해 공장 여러 곳 연결해 공정을 최적화하는 ‘디지털 협업공장’ 등 고도화된 생산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기관, 기준금리도 점진적 조정 검토해야”

>> 1면 ‘통화 긴축-부동산 정책’서 계속

금융권에서는 3대 부채(가계·기업·정부)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을 통화당국과 금융당국이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기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부채가 증가하고, 기업의 빚이 증가하면 세수가 줄면서 국가부채에도 악영향을 미쳐 연쇄효과를 일으킨다는 것.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는 “국내 금융시장 상황과 실물경기 악화가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위험 역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증가율을 명목 GDP 증가 범위 이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하고,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해당 기관들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부족분 23.5조 지방정부에 부담 돌리기로

>> 1면 ‘국세 59조 덜 걷는다’서 계속

정부는 지난 2021년과 작년 대규모 초과세수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엔 두 자릿수대 ‘세수결손’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기재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없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결손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내국세의 40% 안팎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규정에 따라 세수부족 59조 원 가운데 23조5000억 원 정도는 지방정부 부담으로 돌릴 계획이다.

중앙정부 부담 35조 원가량에 대해선 4조 원 안팎의 잉여금, 24조 원의 기

금여유재원, 통상 약 10조 원의 불용예산(편성 후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불용예산 규모는 연말쯤 확정된다.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외평기금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해 이후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매입했다. 이 결과 외평기금에 원화가 많이 축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평기금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조기상환하는 방식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외평기금의 조기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